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12. 18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1월 7일

나. 발 의 자: 이성수 의원 외 8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제266회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성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,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, 제대군인 지원 및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구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- 지원계획의 수립 변경(안 제 5조)
-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신설(안 제12조)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본 조례는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및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,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(2024. 5. 16.)되었음.
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생활안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,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한편,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들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세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임.
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,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·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
 - 「병역법」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육군·해병 2년, 해군 2년 2개월, 공군 2년 3개월(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각각 18개월, 20개월, 21개월로 단축시행 중)이며, 보충역 및 대체역의 경우 복무기간이 최대 36개월임을 고려할 때, 최대 3세 범위 내에서 지원 상한을 조정하는 것은 현행 복무기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의 연령 기준을 “34세 이하”에서 “39세 이하”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, 이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준용하여 구 정책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.
- 안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제3항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계획이 포함된 경우, 이를 별도의 지원계획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임.

-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,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,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임.
- 안 제12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연령의 상한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함.
- 이를 통해 복무기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, 가족돌봄의 책임을 지는 제대군인 청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임.
- 안 제13조(비밀유지 의무)는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, 복무기간을 고려한 지원연령 상한 조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,
- 이를 통해 가족돌봄의 책임을 지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층의 복지를 증진하고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원 및 생활안정에 대한 책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1. .

발 의 자: 이성수·차인영·이순우·우경란·최안순
임헌호·이규선·최봉희·정선희 의원(9인)

1. 제안이유

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,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, 제대군인 지원 및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구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지원계획의 수립 변경(안 제 5조)

다.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신설(안 제12조)

라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거주하는”을 “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34세”를 “39세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관계기관”을 “관계 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(비밀유지 의무)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<u>거주하는</u>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에 대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 1 조 (목 적) ----- <u>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가족돌봄청소년·청년”이란 고령, 장애,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「민법」 제 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<u>34세</u>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	제 2 조 (정 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9세</u> -----.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· 2. (생략) 3. 가족돌봄청소년·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<u>관계기관</u> 과의 협력 방안 4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관계 기관</u>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③ 「 <u>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</u>

<신 설>

<신 설>

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 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제12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(비밀유지 의무) 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